

터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 성 전 회장으로 부터 직접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힌 검찰은 리스트 속 남은 6인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설령 의혹이 사실이라도 공소시효를 완성한 사안도 있었다.

2006년 9월 성 전 회장으로 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5년)은 물론 뇌물죄(7년)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무렵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허태열 전 실장과 메모지에 이름만 적혀 있는 이병기 실장도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단 특별수사팀은 5월 29일 리스트 속 6인에게 일제히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다. 6월 들어 대선캠프에서 요직을 맡은 3인 가운데 서 시장과 유 시장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를 벌였다. 홍문준 의원의 경우, 6월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도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성 전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해 연말 특별사면된 과정에 금품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 전 회장이 특사를 받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권병 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단서가 나왔지만 두 의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특별수사팀은 7월 2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착수 82일 만의 발표였다. 그간 검찰은 총 140명을 상대로 460여 차례 조사했고 압수수색도 33차례 이뤄졌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만 9.3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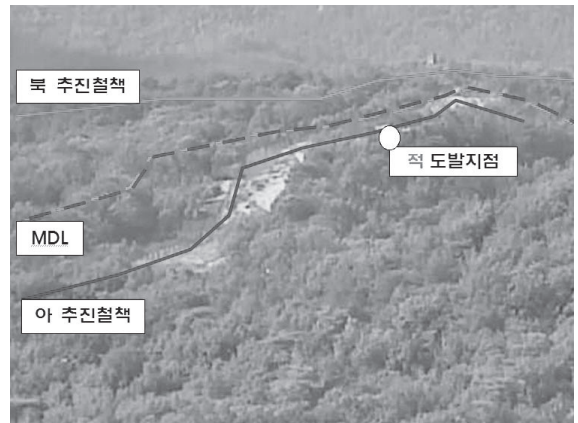
그러나 리스트 속 8명 중 기소 대상자가 2명에 그쳐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스트 속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은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

아울러 대선자금이나 특사 관련 의혹 역시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北 지뢰도발에도 8·25 합의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 개최

■ 北 목함지뢰·포격도발...긴장감 휩싸인 휴전선

2015년 8월 4일 오전 7시 35분과 40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보병 1사단 11연대 비무장지대(DMZ) 구역에서 두 차



▲ 8월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내용을 8월 10일 발표하고 “북 도발에 응당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 관측소에서 바라본 사고발생 현장 <합참 제공>

레의 폭발이 일어났다. DMZ로 투입되는 우리 군 병력이 이용하는 출입문인 추진철책 통문(폭 1.5m)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잇따라 터진 것이다.

통문을 지나려던 하모(21) 하사가 두 다리를 잘랐고, 하 하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모(23) 하사도 2차 폭발에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폭발물의 정체는 북측이 우리 군의 이동통로에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 3기로 드러났다. 북측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나 8월 17~28일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방해, 남남갈등 유발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도발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은 같은 달 10일,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된 이후 11년 만에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수일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15일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의 공개경고장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어 20일 오후에는 서부전선에서 남쪽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행했다.

우리 군은 북측이 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mm 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사격한 뒤 최고수준 경계태세를 발령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병력을 전진배치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왔고, 한 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에 휩싸였다.

■ 일촉즉발 위기서 합의 도출...반전드라마 써낸 남북

그러나 북측은 다른 한편으로 대화 카드를 꺼내드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당시 북한 대남업무를 총괄한 김양건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는 8월 21일 오후 4시께 본인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21일 혹은 22일 판문점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대 1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우리 측은 2시간 뒤인 오후 6시께 김 전 비서가 아닌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 안보실장 간 접촉을 제의하는 수정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은 이튿날 오전 북측 대표로 황 총정치국장과 김 전 비서, 남측 대표로 김 안보실장과 홍 장관이 참여하는 2대 2 고위당국자 접촉을 갖자며 재차 수정 제의를 했다. 김 전 비서의 남측 카운터파트는 홍 장관이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청와대와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북측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남측은 북의 수정제의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한반도 위기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됐다.

북측의 최후통첩 시한을 조금 넘긴 8월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양측 대표단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무박(無泊) 4일간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협상 중에도 북한은 잠수함 전력의 70%에 해당하는 잠수함 50여 척을 기지에서 내보내 수중에 전개하고 스킨드와 노동 등 단·중거리 미사일을 전개해 발사 태세를 갖췄으며, 한·미 연합군은 이에 맞서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협의했다.

일각에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칫 한반도 위기 상황이 걷잡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남북 양측은 북한의 지뢰도발 사과·재발방지책 마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25일 새벽 '8·25 남북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당한 것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군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항이 담겼다.

■ 봄날 맞았던 남북관계, 기습 핵실험에 되서리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사상 초유의 장시간 연속 접촉을 통해 전쟁 위기를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평화의 길로 바꿔놓았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동창리 발사대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북은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이어 양측은 합의대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졌다. 분단 이후 스무 번째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는 북측 96가족(255명)과 남측 90가족(394명)이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을 만났다.

지지부진하던 남북 민간교류도 붓물이 터진 듯 남북한 주민접촉 건수와 방북인원이 급증하는 등 급격히 규모를 키웠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과 8·25 합의 이후 이산상봉 행사와 개성 만월대 특별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남북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남북종교인모임 등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린 결과다.

개성이 고향인 일부 이산가족은 만월대 특별전을 계기로 65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정부 당국자는 이를 두고 “남북간 실질적 협력으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꿈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대북 인도지원 규모도 254억원으로 전년도(195억원)보다 30.3% 증가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 자체 재원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과 관련해선 기대만큼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8·25 합의 이후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3차례에 걸쳐 촉구했고, 북측은 답을 하지 않다가 11월 20일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해 왔다.

국내외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 실타래처럼 얽힌 남북 현안이 하나둘 풀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됐다. 남측은 1월 말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동시에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문에 먼저 명시해야만 다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결과다.

정부는 북측이 8·25 합의의 정신을 살려 후속 회담에 호응해 오길 기대했지만,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기습 강행한 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남북관계는 8월 한반도 위기 당시로 퇴행하고 말았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6개 합의내용

-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사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